

제2차 육지소규모어항개발 5개년('98~2002년)

생활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02년까지 498개항에 900억원 투입

.....
 제2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올해는
 제1차 5개년사업계획에서 완료되지 않은 어항과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어항을 대상으로
 어민에게 직접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 백승 / 행정자치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현황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은 지난 1988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을 계기로 수산청에서 업무를 이관 받음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4개년계획과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제1차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제2차 5개년(1998~2002년)계획 수립에 따라 올해가 제2차 계획의 첫해가 된다.

우리나라 육지소규모어항은 어선과 28만1,392명의 어업인 1,047개로서 2만9,850척의 이 이용하고 있다.

〈육지소규모어항 현황〉

구 분	1993년	1997년	증 감
어 항 수	740	1,047	307(41%)
이용인구수	341,803	281,392	△60,411(17.7%)
가 구 수	97,460	87,062	△10,398(10.7%)
어 선 수	23,388	29,850	6,462(27.6%)

〈시도별 육지소규모어항 현황〉

제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47	28	10	18	22	30	22	14	382	89	359	73

사업계획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실시되는 제2차 5개년계획에는 498개 육지소규모어항을 대상으로 선착장·물양장 등 소득기반시설 478건 16,377m와 방파제·호안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389건 20,061m(총 867건 36,438m)에 각각 458억원(국비 229, 지방비 229), 442억원(국비 221, 지방비 221) 총 9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1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422개 어항을 대상으로 당초 투자계획의 82%인 451억원을 투자하여 512건(사업계획의 72%)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추진방향

제2차 5개년계획은 어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선을 안전하게 계류케 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어민의 안정된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낙후된 육지소규모어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개발대상어항은 소규모어항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감

〈제1차 5개년계획 추진 실적 (1993~1997년)〉

구 분	사 업 량(건)			사 업 비(억원)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712	512	71.9	553	451	81.6
소득기반시설	381	274	71.9	220	127	57.7
생활편의시설	331	238	71.9	333	324	97.3

안하여 선정하고, 제1차 사업계획중 미추진 사업과 어업인에게 직접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그리고 어항시설은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시설이 확보되도록 어항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대상사업 선정,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키로 했다.

기대효과

선착장·물양장 등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출어시간 단축 및 노동력 감축 효과로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어항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어민 생활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어선 등 선박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어 자연재해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민의 안정된 생활향상을 도모하여 소규모 영세어민들의 정착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이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2차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세부계획을 수립도록 하였으며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매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속적인 개선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1998년도 추진 계획

제2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올해는 제1차 5개년사업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어항과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어항을 대상으로 어민에게 직접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향하고 집중투자로 투자효과를 제고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65개 어항(11개 시·도,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1차 잔여사업 41건, 43

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24억원) 그리고 제2차 신규사업 25건, 21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1억원) 등 총 66건에 64억원(국비 29억원, 지방비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문별 사업계획〉

사업별	구 분	어항 수	사업량 (건/m)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65	66 1,590	6,391	2,850	3,541
소득	소 계	32	32 961	2,996	1,463	1,533
기반	선착장	28	28 890	2,752	1,341	1,411
시설	물양장	4	4 71	244	122	122
생활 편의 시설	소 계	34	34 629	3,395	1,387	2,008
	방파제	30	30 339	3,129	1,254	1,875
	호안시설	3	3 270	230	115	115
	진입로, 준설	1	1 20	36	18	18

〈시·도별 사업계획〉

시·도	시군	어항 수	사업량 (건/m)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계		38	65 1,590	6,391	2,850	3,541
부산	1	1	1 20	100	50	50
인천	1	1	1 30	100	50	50
울산	1	2	2 40	176	88	88
경기	1	1	1 300	130	50	80
강원	6	9	9 70	578	289	289
충남	2	2	2 154	218	109	109
전북	1	1	1 80	100	50	50
전남	9	14	14 357	1,244	622	622
경북	4	11	11 110	1,100	466	634
경남	8	15	15 319	1,484	722	762
제주	4	8	8 110	1,161	354	807

계획추진은 시·군에서 사업 추진과 사업비를 집행하며, 시·도에서는 사업추진의 지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계획을 총괄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IMF 시대에 공공부문 사업의 조기착공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를 활성화해 나가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사중 재구입 곤란

시공자 부도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자를 엄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법령상 저촉여부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계획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금지하는 등 계획적이고 차질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읍·면·동 공무원을 보조자로 지정운영 (필요시 마을책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는 등 공사감독자의 지정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시설물을 읍·면·동 공무원 1명과 마을주민 1명을 관리책임자로 하여 지정관리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표지판을 시설물에 부착토록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발전방안

첫째, '99년도 사업부터는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비 투자에 비례하여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둘째, 지역별 형평을 고려하여 '수심'을 고려한 국비지원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국비지원액이 대폭 증액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을 활성화 나갈 계획이다. ❶